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의 원인과 전쟁으로의 발전 과정 연구: 브레머 분석틀을 중심으로

김 창 환*

요약

2025년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대상으로 브레머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간의 전쟁’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쟁의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전쟁 과정 이론에 근거한 분석 결과, 태국-캄보디아 분쟁은 조직적인 요소, 국가 속성, 이원적 관계, 역사적 경험 등 다차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속되어 온 국경분쟁은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뿌리아 비히아 사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갈등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사원은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현재 휴전 상태에 있으나, 양국은 이 국경 문제를 자국의 애국심과 결부시켜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 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된다.

주제어: 태국-캄보디아 분쟁,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간의 전쟁, 브레머 교수, 국제사법재판소(ICJ), 뿌리아 비히아 사원

I. 서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양국 국경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25년 7월과 12월에 발생한 분쟁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7월 분쟁은 5월부터 뿌리아 비히아 사원(Prasat Preah Vihear) 인근에서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촉발되었다(연합뉴스 2025/07/28). 이후 양국은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태국산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경 지역에서는 7월 16일 태국군이 순찰 중 지뢰 폭발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태국은 이를 캄보디아의 사전 도발로 간주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국경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양국 군이 F-16 전투기와 다연장 로켓포를 동원해 대규모 교전을 벌였다. 군인과 민간인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경 충돌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휴전을 촉구하였다.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7월 28일 휴전에 합의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0월 26일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조선비즈 2025/10/26). 또한 국경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 제거에 협력하며, 전투 재개를 방지하기 위해 옵서버가 상황을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THE nation 2025/10/28).

12월 분쟁은 11월 10일 태국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지뢰 폭발로 태국 군인 2명이 부상하자, 태국 측이 휴전협정 이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2일까지 양국은 국경 일대에서 교전을 벌였으며, 내재된 긴장은 12월 7일 태국 시사켓 주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에 총격을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태

국 국방부는 캄보디아군이 국경 일대에 대전차 미사일과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하며, 휴전협정이 사실상 파기되어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었다고 밝혔다(Bangkok Post 2025/12/08). 이후 양국은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고, 장기적인 분쟁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12월 27일 양국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우선 일단락되었다(KHMER TIMES 2025/12/27).

본 연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단순한 분쟁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쟁의 원인과 연계하여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Binghamton)의 스튜어트 A. 브레머(Stuart A. Bremer)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 간의 전쟁’에 관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쟁으로의 진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스튜어트 A. 브레머·토마스 R. 쿠샤 1997, 31).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선행연구, 다양한 서적 및 보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서론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브레머 교수의 전쟁 과정 이론 및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조건과 과정을 심층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2025년 7월에 발생한 군사 분쟁이 전쟁 직전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및 분석틀

1. 선행연구

태국과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국 간 국경분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뿌리아 비히아 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과 국경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장식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박장식 2011, 161-178). 그는 지도를 활용해 사원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사원에 이르는 경로와 구체적인 배치도 및 그림을 통해 사원의 구조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 간 사원 문제로 인한 군사적 충돌의 원인과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경분쟁으로 인한 긴장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국경분쟁의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두 국가 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누쿱(Neil B. Nucup)은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뿌리아 비히아 사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해당 판결의 심리 범위가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획정 문제가 아니라 뿌리아 비히아 사원에 대한 주권 문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Nucup 2019, 152). 즉,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에 부여된 판결 권한의 범위가 당사국들이 청구한 최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청구 초과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판력은 판결 주문과 분리할 수 없거나 필수적인 판결 이유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문용일 2024a, 48). 따라서 누쿱의 연구를 통해 1962년 판결에서 국경 획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용일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을 중심으로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분쟁의 정치화 과정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문용일 2024b, 167-201). 그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핵심 쟁점이 1902년 시암과 프랑스 간 국경조약의 해석과는 달리, 사원 주변 지역 국경의 안정성 여부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내 정치 상황과 사원 분쟁 간 상호작용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2013년 판결과 영토분쟁의 잠정적 해결이 오히려 무력 충돌 확산 위험을 높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출구 전략 모색의 필요성을 깊이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국경분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다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분쟁이 민족주의 가치, 분쟁의 정치화, 정치·사회적 비용 등 주요 변수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태국과 캄보디아 관련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양국 간 갈등,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역할, 아세안의 중재와 분쟁 관리, 민족주의와 분쟁 격화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경향 또한 동시에 관찰되었다.

2. 브레머 교수의 전쟁과정 이론과 분석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2025년 분쟁은 영토 문제,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 정부 간 불신, 군부의 강경 대응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법률저널 2025/07/28), 정치학, 경제학, 군사학, 지정학 등 관련 학문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레머 교수 연구팀

의 전쟁 과정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¹⁾

브레머 연구팀은 제1차 세계대전 사례를 통해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정치적 조건을 포함한 여러 상황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 운영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연구팀은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이중호 2014, 186-188). 이에 본 연구팀은 기존 전쟁 분석 연구들이 전쟁의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전쟁을 시간에 따른 동적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모형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주로 전쟁의 속성 설명과 예측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이중호 2022,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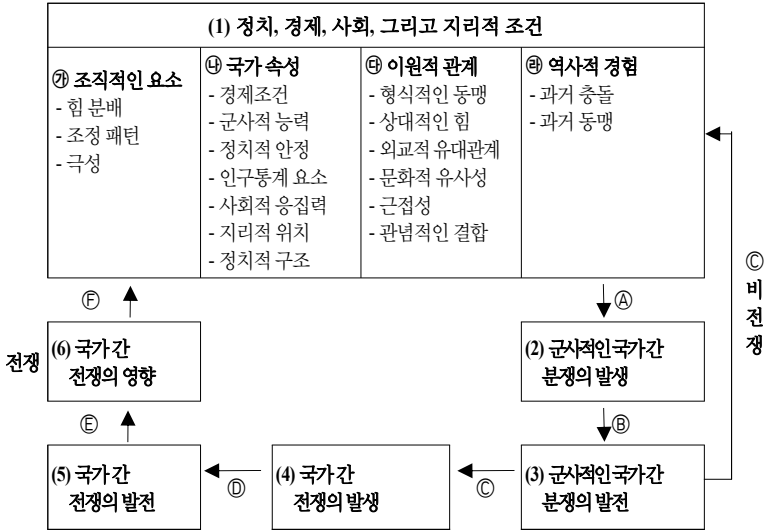
브레머는 자신의 연구에서 전쟁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가 간 분쟁의 핵심 변수를 정치, 경제, 사회, 지리적 조건으로 <그림 1>과 같이 구분하였다(브레머 외 1997, 26-27). 이 변수들은 국가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이 군사 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그는 해당 변수들을 조직적인 요소, 국가 속성, 이원적 관계, 역사적 경험의 네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일관된 논리적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 노력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통해 평화 상태인 비전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관련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 충돌이 지속되면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며,

1) 본 연구 방법은 1997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이래,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까지 총 두 건의 연구에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이중호 교수가 병자호란과 러일전쟁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 간의 전쟁



출처: 스투어트 A. 브레머, 토마스 R. 쿠삭, 『전쟁의 과정: 과학적 전쟁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김병열 외 옮김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p. 31.

전쟁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일정 시점에 종결될 경우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조건과 국가 운영 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이종호 2022, 176).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쟁의 영향이 이후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브레머 외 1997, 26-36).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1>에 제시된 논리적 틀을 바탕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군사 분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해당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 분량의 한계로 인해 모든 조건과 요소를 다룰 수 없으므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핵심 사항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Ⅲ.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조건과 과정 분석

1. 조직적인 요소

‘조직적인 요소’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 및 지역 체제 내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국가는 냉전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상이하므로, 양국의 외교정책 및 그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분쟁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지향하는 태국

태국의 외교정책은 인접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력 및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하며, 전통적인 중립 외교 전략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외교부 2022b, 46). 1967년 아세안(ASEAN)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태국은 회원국 간 결속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함하는 ‘그레이터 아세안(Greater ASEAN)’ 구상을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의 확대와 통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문제 및 인류 안보 등 국제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외교부 2022b, 48-50).

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공산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공산화 이전 시기에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는 동시에 미군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 내 반공 군사체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가 완료된 이후 미군의 철수는 가속화되었고, 1976년 6월에는 약 4만 8,000명의 미군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후 양국은 태국 국경에 대한 베트남군의 침범과 캄보디아 사태 등 공산주의 확산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왔다(임경한 2019, 94).

태국은 군부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가 중 하나로, 푸미폰 왕이 1946년에 즉위한 이후 그의 승인하에 2014년까지 총 11차례의 성공적인 쿠데타가 발생하였다(현시내 2024, 154). 이 중 1991년 군부 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강력히 반대하며 약 1,640만 달러 규모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1992년 1월에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1994년 10월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안 총리의 미국 방문 시 태국 내 해상 지원기지 설치 요청이 거부되는 등 양국 간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이후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2년 6월 오스틴 국방장관과 7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태국 방문을 통해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창립 멤버 13개국 중 하나로 참여하였다(외교부 2022b, 50-52). 현재에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시기 동안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태국과 중국은 1975년 인도차이나 3국의 공산화 이후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우호적 협력 관계를 모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이후, 태국은 대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서 중국과 협력하였다. 군사 부문에서는 1986년부터 태국의 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중국이 전차, 장갑차, 야포, 군함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1991년 태국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은 태국 군부를 지지하며 태국 군부 및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태국 정부는

대만과 경제, 통상, 문화 분야에서 제한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 2월, 탁신 총리는 중국 신·구 지도부 출범 직전에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시진핑 부주석이 태국을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수형자 이송 조약, 2011~2013년 문화 협력 계획, 해양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다(외교부 2022b, 53-55). 또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정부에 대해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임경한 2019, 93). 현재 시진핑 집권 3기에도 양국 간 우호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2) 점차 심화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친중화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빈번한 외침과 내란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헌법은 영구 중립과 비동맹 정책을 채택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의 평화 공존을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외교부 2022a, 46). 1953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비동맹과 중립 외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1965년 5월, 시하누크 국왕은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반발하여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하였다. 1970년 크메르 공화국 시기 론 놀 정권은 친미 성향을 보였으며, 1975년부터 4년간 지속된 민주 캄푸차 시기 폴 포트 정권은 마오쩌둥 사상을 표방하며 친중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후 1979년 베트남이 수립한 삼린 정권은 친베트남 및 친소련 성향을 띠었다.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을 계기로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외교부 2022a, 13-16).

미국의 가치 기반 외교는 권위주의 체제인 캄보디아를 위협 요인으

로 인식하는 한편, 지정학적 및 안보적 측면에서는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캄보디아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파리평화협정 체결 당시 크메르 루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훈센 정권 초기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정연식 2006, 93-95). 그러나 1997년 훈센의 무력 쿠데타 이후, 미국은 경제 제재, 원조 중단, 유엔 대사 임명 반대 등 반(反) 훈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양국은 가치관과 규범의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을 경험해왔다. 이에 훈센 정권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제한적 협력을 기반으로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왔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부상 가속화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국제관계는 미중 간 힘의 균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시행으로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패권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주용식 2017, 113-115).

중국은 캄보디아 내전기간 동안 친소련 및 베트남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크메르 루즈를 지원함으로써 저항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이후 훈센 정권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997년 발생한 쿠데타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훈센은 중국으로부터 군사 지원, 무상 원조, 무이자 차관 등을 제공받았으며, 프놈펜에 위치한 대만 연락사무소를 추방하였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은 공공사업, 인프라, 수력발전 분야에 약 29억 달러 규모의 연성 차관과 무상 원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2016년 10월 프놈펜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연성 차관 제공, 부채 탕감, 군사 지원을 통해 캄보디아의 핵심 경제 및 군사 후원자로 부상하였다(주용식 2017, 119). 이러한 캄보디아의 친

중 기조는 2023년 2월 훈센 총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양국 간 ‘다이아몬드 협력 체계’ 구축 합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정연식 2024, 18).

3) 소결론

동남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집중되는 주요 무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 지역을 남중국해로의 해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 진출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태국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으로서 경제적 지원과 무역 활동을 통해 훈 마넷 정부의 통치 기반 강화 및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외부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원조는 미국과 달리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의 형태를 띠며, 인프라 구축 지원 측면에서 캄보디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친중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가 속성

‘국가 속성’은 경제조건, 군사적 능력, 정치적 안정, 인구통계 요소, 사회적 응집력, 지리적 위치, 정치적 구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요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해 태국의 경우에는 국내 정권 유지 전략과 특성, 그리고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반면 캄보디아는 국내 정권 유지 전략과 특성, 사회 문제 및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는 분쟁이나 전쟁이 국내 정치, 사회, 경제적 지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1) 태국의 정치·사회·경제 요소

태국 민족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태국 북부와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동부에서 소국가를 형성한 뒤 남하했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태국 역사는 수코타이, 아유타야, 톤부리 시대를 거쳐 178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짜끄리 왕조 시기로 구분된다. 현 국왕 와치라롱꼰은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 서거 후 왕위를 계승하여 같은 해 12월 공식 즉위하였다(김홍구 외 2019, 130).

태국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한 민족’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왕실에 대한 애착 또한 깊다. 한편, 불교 사찰은 전통적으로 태국인의 교육 기관으로서 사회 규범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외교부 2022b, 82-83).

태국은 1960년대 초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무역적자 확대,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2년 이후 사스(SARS), 쓰나미, 쿠데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

지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 경제 회복과 내수, 수출, 관광의 증가에 힘입어 약 7% 성장률이 기록되었으나, 2011년 대규모 홍수로 인해 제조업과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임은희 2019, 38).

2012년에는 홍수 복구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7%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나, 2013년에는 경기 부양 효과의 소진, 글로벌 경기 부진, 반정부 시위 및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다.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으나, 성장률은 여전히 1% 이하에 그쳤다. 2015년 이후 군사정권의 사회 안정 및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과 공공 투자 증가, 관광객 수 확대 등에 힘입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률은 3~4%대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하였으며, 2021년에는 1.6% 성장률이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외교부 2022b, 70-80). 2022년 이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2022년 성장률은 약 3.5%였다(외교부 2022b, 70-80).

2025년 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최초 3%에서 하향되어 2.1%로 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과 국경분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 2025/05/08). 특히 태국은 2024년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4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 흑자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대중국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어,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문제 해결이 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2) 캄보디아의 정치·사회·경제 요소

캄보디아 역사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메콩 델타 유역에서 푸난(Funan)과 첸라(Chenla) 왕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802년 자야바르만 2세가 스스로 신왕을 자처하며 앙코르 왕조를 세워 고대 크메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이동운 2004, 101-102). 1431년 시암의 침략 이후에도 캄보디아는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화 전까지 왕국을 유지했다.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1953년 11월 사실상 독립했다. 이후 크메르 공화국, 민주 캄푸치아,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캄푸치아국을 거쳐 1993년 5월 총선에서 입헌군주제를 채택했으며, 같은 해 9월 23일 제헌의회가 신헌법을 공포했다(박성관 2003, 326-336).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경제를 논의할 때 훈센 총리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윤범 2011, 102-111). 훈센 총리는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군이 크메르 루주 정권을 붕괴시키고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 주요 요직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1982년에는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헝 삼린에 의해 만 30세의 나이로 부수상 겸 외교부장에 임명되었으며, 1985년 1월 14일에는 만 32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수상에 취임하였다. 이후 2023년 8월까지 약 38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캄보디아를 통치하였고, 이후 아들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박진영 2025, 78-80). 현재 그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의 대표이자 상원의장으로서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97%는 크메르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계, 베트남계, 고산족, 참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헌법은 국교로 불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95%가 불교를 신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캄

보디아인들은 ‘양코르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정용균 2018, 7-10).

2019년까지 캄보디아는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외교부 2022a, 72-90). 2015년에는 중저소득국으로 진입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1,648달러에 이르렀다. 캄보디아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다각화, 첨단 기술 도입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와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있다(외교부 2022a, 72-90)

2024년 캄보디아의 대미 수출액은 약 99억 2,000만 달러인 반면, 미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액은 약 2억 6,415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5/04/03). 한편, 캄보디아와 중국 간 연간 무역 규모는 약 151억 9,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캄보디아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117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큰 무역적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제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부문은 납치 및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우려와 온라인 사기 산업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박진영 2025, 102-104). 이에 캄보디아는 달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 및 종속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소결론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쟁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두 국가가 803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불가피하다(이병도 2018, 246-247). 특히 빠리아 비히아 사원은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지역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THNATION 2025/12/29).

태국은 2025년 국내 정세에서 군부와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에 군부는 정치적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고,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강조함으로써 분쟁의 정치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을 지연하며 갈등을 지속시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훈 마넷 총리 취임 초기의 권력 장악력은 아버지인 훈센 총리 재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관광 산업의 침체와 온라인 스캔들로 인한 국내 문제의 외부 전환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국경분쟁이 집권 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이원적 관계

‘이원적 관계’는 형식적인 동맹, 상대적인 힘, 외교적 유대관계, 문화적 유사성, 근접성, 관념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군사력 평가와 군사적 대응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태국의 전쟁 준비

태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된 삼군 통합 체제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전체 상비병력은 약 36만 명에 달한다. 세부 군사력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군과 비교할 때 태국군이 군사력 측면에서 현저히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태국 및 캄보디아 군사력 현황

구분	태국	캄보디아
병력	약 360,000명	약 124,300명
전차	약 400대	약 200대
야포	약 2,600문	약 480문
전투 가능 군용기	112대 ※ F-16 28대, JAS 39 그리펜 11대 등	없음
전투함	경함공모함 1척, 호위함 7척, 초계함·초계정 등 68척	초계정 등 13척
국방 예산	57억 3천만 달러	13억 달러

출처: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 연합뉴스 2025년 7월 25일 보도 내용 “태국-캄보디아 전면전 우려... 압도적 전력 우위 태국군 선택 주목.”

병역 제도는 2년의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 통수권은 상징적인 권한으로서 왕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군사 권한은 국방 장관을 겸임하는 총리, 총사령관, 각 군의 사령관 등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방부, 총사령부, 그리고 육·해·공군은 국방 예산 편성 및 대외 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은 자체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주요 5대 공중파 TV 채널 중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1개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등 언론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외교부 2022b, 65-66).

태국군은 1976년 미군 철수 이후 미군과의 군사적 유대가 다소 약화

되었으나, 마닐라 협정과 코먼-러스크(Khorman-Rusk) 공동성명에 따른 미국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여 유사시 군사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982년부터 매년 ‘코브라 골드(Cobra Gold)’ 훈련을 실시하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임경한 2019, 94).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의 제재가 시행되면서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9년 이후에는 중국과의 군사 훈련 및 군사학교 학생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 안보 협력을 위하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확대판(ADMM+) 등 다수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안보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의 합동 훈련, 인도네시아와 해·공군 연합훈련, 싱가포르와 해·공군 훈련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군사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외교부 2022b, 66-67). 그러나 국경분쟁 문제로 인해 캄보디아와는 별도의 군사 협력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태국 군부는 정치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수의 외신은 양국 간 분쟁이 심화되어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태국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캄보디아의 전쟁 준비

캄보디아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헌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상비병력은 약 12만 4천 명에 달한다. 세부 군사력 현황은 <표 1>과 같다. 명목상 캄보디아군의 최고사령관 직책은 국왕이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는 1999년 훈센 총리가 시

하누크 국왕에게 군과 경찰의 개혁을 이유로 군 최고사령관 직책에서의 사임을 건의하였고, 국왕이 이를 수용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1996년부터 3년간 병력 3만 1,500명을 감축하였다. 이어 1999년 5월에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추가 병력 감축이 결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감군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03년 이후 병력 감축이 연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외교부 2022a, 31-32).

캄보디아군은 2006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남수단, 차드, 레바논, 시리아 등 총 9개국에 8,302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0년 7월 이후에는 미군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합동 군사훈련인 ‘앙코르 센티넬(Angkor Sentinel)’을 캄보디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선거를 이유로 해당 훈련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외교부 2022a, 31-32).

한편, 캄보디아는 2016년부터 중국과 ‘골든 드래곤(Golden Dragon)’이라는 명칭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의 친중 행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주용식 2017, 126).

2026년부터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방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태국과의 국경분쟁이 심화되고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는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징병법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국가 방위 역량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병 대상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국민으로, 남성은 의무 복무를, 여성은 지원 입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복무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과의 국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병력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2025년 국가 예산 약 93억 달러 중 국방 예산을 약 7억 3,900만 달러로 책정했다(서울신문 2025/07/15).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The Phnom Penh Post 2025/12/27).

3) 소결론

태국군은 공군력과 포병 전력 면에서 캄보디아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군부 내 보수적 강경 세력은 캄보디아와의 충돌로 인해 애국주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태국 국민의 군부 지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 정책을 주도하는 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캄보디아군 역시 전투 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징병제 도입과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을 감안할 때,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양국 모두 정권 차원에서 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4. 역사적 경험

‘역사적 경험’은 과거의 갈등과 동맹 관계를 포함한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경우, 군사적 동맹 형성이 어려운 국내외 정치적 환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국 간 뿌리아 비히아 사원 영토 분쟁 등 과거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태국과 캄보디아는 광범위한 산림 지대를 경계로 오랜 기간 국경을

공유해 왔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때로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장기간 패권을 유지해 온 반면, 캄보디아는 앙코르 왕국 시기를 제외하면 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간섭을 받아왔다.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태국은 캄보디아 서부 지역과 버마 산지방, 말레이시아 북부 등에 대한 중주권을 주장하며 바탐방과 씨엠립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프랑스가 이를 거부하자 태국은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프랑스는 프놈펜에 재진주하여 태국으로부터 바탐방과 씨엠립 지역을 회복하였다(조상현 2016, 46).

1953년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캄보디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공산주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정권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혼센 가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치되고 있다. 반면, 태국은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의 공산화와 19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안보 위협이 심화되자, 미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하며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 국경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중 뿌리아 비히아 사원은 씨엠립 인근의 앙코르 유적지와는 달리 산 정상에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양국 간의 국경분쟁 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당렉 산맥 일대는 양국의 국경 지역으로서, 북쪽 태국 국경 인근은 지형이 낮은 반면, 남쪽 캄보디아 영토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국경선에 관한 논란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박장식 2011, 161).

1904년 프랑스 보호령 하에 있던 캄보디아와 시암은 분수령을 기준으로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07년 양국의 공동 국경선 확정 위원회는 해당 국경선을 표시한 지도를 작성하였다(박장식 2011, 162). 1934년 태국은 1904년 부록 지도에 표시된 뿌리아 비히아

사원의 위치가 국경 조약상의 분수령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1950년 태국은 해당 사원 지역에 일방적으로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였으나, 프랑스는 캄보디아 식민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1953년 캄보디아가 독립한 이후 국경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조상현 2016, 46-47).

쁘리아 비히아 사원과 관련하여, 1958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양자 협상이 결렬된 이후, 캄보디아는 해당 사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제소 당시 캄보디아는 1904년에 작성된 지도에 명시된 사원의 위치와 확정된 국경선이 국제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태국은 해당 지도가 합동위원회가 아닌 프랑스 단독 조사 결과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경선이 지도상 합의된 분수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중대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 6월 15일, 해당 지역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문용일 2024a, 45-47).

2) 2008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결

2007년 캄보디아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을 단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시도하자, 태국은 해당 사원을 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에 뿌리아 비히아 사원과 인접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시켜 단독 등재를 추진하였다(문용일 2024b, 179).

태국은 군대를 동원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2008년 7월 이후 양국 군 약 4,000명이 국경 지역에서 대치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지뢰 폭발과 총격전이 발생하였다. 4월 6일부터 7일까지 양국 합동국경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군대 철수나 국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9년 8

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일부 군대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0년 1월 국경 인접 지역에서 간헐적인 총격전이 재발하였고, 1월 31일에는 태국군의 국경 침범 사건이 발생하여 충돌이 지속되었다. 2월 말 훈센 총리의 국경 방문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3월 말부터는 사망자 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4월에는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분쟁이 고조되었다(조상현 2016, 47).

2011년에 발생한 국경분쟁은 제한적 전쟁 수준으로 확대되어 30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60명의 부상자, 그리고 13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켰다. 2012년에는 분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1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군대 철수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2012년 1월 25일에는 총격전으로 태국 군인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4월 11일 양국은 불법 수목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철수하고 경찰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7월 18일 이를 실행함으로써 국경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조상현 2016, 47).

특히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 모호한 조항에 대해 양국 간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캄보디아는 2011년 5월 해당 판결문의 해석 명확화를 재차 요청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13년에 1962년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문용일 2024a, 45-47). 한편, 2014년에 체결된 ‘사원 인근 군 병력 철수 및 국경 순찰 경찰 배치’에 관한 합의는 원활히 이행되었으며, 이 조치는 갈등의 핵심 지역인 사원 내 군대를 경찰로 대체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3) 소결론

현재까지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뿌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 4.6km²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으며, 태국의 공식 기준인 1:50,000 축척 지도에 표시된 경계를 계속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Bangkok Post 2025/12/26). 이처럼 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모호성을 근거로 뿌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 4.6km²를 ‘분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캄보디아는 상징적인 세계문화유산인 이 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양국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민족주의를 동원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결집시키는 주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지역인 뿌리아 비히아 사원 주변은 상호 불신으로 인해 사소한 사건도 급격한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원 주변 지역의 특성상 양측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IV. 군사적 분쟁의 발생과 전쟁으로 발전 가능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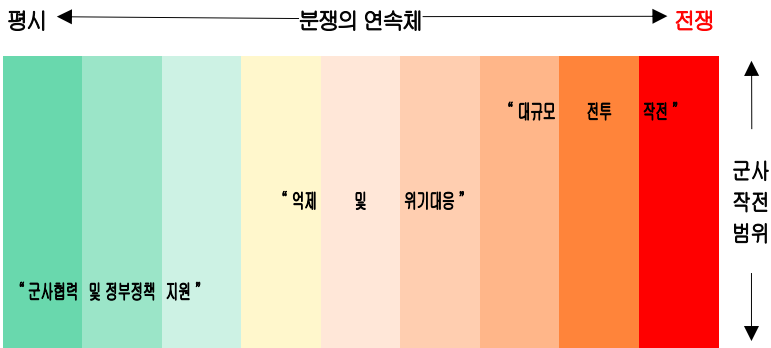
1. 군사적 분쟁과 전쟁의 범위

‘분쟁’의 사전적 정의는 문제를 야기하여 시끄럽고 복잡한 다툼을 의미하며, 확장된 의미로는 대규모 충돌을 포함한다. ‘군사적 분쟁’은 군사력을 동원한 충돌을 지칭한다. ‘전쟁’은 상호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조직적 폭력 행위로서, 대규모의 지속적인 전투를 특징으로 한다(배일수 외 2023, 87; 합동참모본부 2023, 1-23). 특히 전쟁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국가 간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경우 주로 발생하며, 적이 선전포고 후 공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발발하는 경우가 많다(합동참모본부 2023, 1-24).

<그림 2>는 분쟁과 전쟁을 포괄하는 군사작전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시부터 전시까지 ‘분쟁의 연속체’ 내에서 다양한 군사작전 및 활동이 수행되는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하거나 이중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경계가 중첩되고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체제 내에서 한 국가가 타국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해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림 2> 군사작전 범위



출처: 육군본부 2021, 1-19.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과정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본 연구 3장 ‘태국-캄보디아 분쟁의 조건과 과정 분석’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의 원인을 요소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양국을 후원하는 세력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태국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캄보디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25년 군사적 분쟁 발생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의 조건과 과정을 <그림 1>에 제시된 조직적인 요소, 국가 속성, 이원적 관계, 역사적 경험의 네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발생한 분쟁에서는 약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상황은 비교적 신속하게 안정화되었다. 반면, 2025년에 발생한 분쟁은 이전 사례들과 달리 확산 양상이 현저히 달랐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25년 군사적 분쟁의 촉발 원인과 급격한 확산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5년 5월 26일, 양국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었다. 양국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국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5월 28일 양국은 적대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육로 국경이 폐쇄되고 캄보디아가 태국산 채소 및 과일 등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수입 중단 조치도 이루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무력 충돌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 지휘관들은 상호 회동하여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배경에는 캄보디아의 실력자 훈센 전 총리와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 간 국경분쟁과 관련된 6월 18일자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통화에서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센 전 총리를 ‘삼촌’이라 칭하며 자국 군 사령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태국 국민의 분노가 촉발되었다(한국일보 2025/06/21).

결과적으로, 태국 헌법재판소는 7월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직무 정지를 명령하였으며, 8월 29일에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비록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해임되었으나, 그녀는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와 훈센 전

총리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갈등 해소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훈센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으며, 패통탄 친나왓 총리 또한 깊은 배신감을 표명하였다(BBC NEWS 코리아 2025/08/29).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언쟁이 급격히 격화되었고, 갈등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결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직무 정지 이후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경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23년 7월 16일, 태국군 5명이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중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한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다. 태국 군부는 이 사건이 캄보디아 측의 의도적인 지뢰 매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후 7월 24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태국군은 국경 일대에서 캄보디아 드론의 선회 소리를 포착하였으며, 캄보디아 군인이 대전차 발사기 등 무기를 휴대한 채 태국 군사기지 인근 철조망 울타리에 접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과 캄보디아 군인 간 충돌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다. 같은 날,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 로켓을 발사하며 교전을 먼저 도발하였고, 이로 인해 태국 민간인들이 부상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태국은 F-16 전투기를 투입하는 등 캄보디아의 군사 표적을 공격하며 교전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양국의 외교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조선일보 2025/07/25).

캄보디아는 태국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대응을 요청하였다. 이후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에 기갑 부대를 배치하고 다련장로켓 포격을 실시하였으며, 태국군 또한 더욱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태국은 7월 25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7월 26일에도 교전이 지속되었다. 7월 24일 발생한 대규모 교전으로 양국 군인 35명이 사망하고 약 130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21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BBC NEWS 코리아 2025/07/26).

양국이 사흘 만에 휴전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 중인 국가와는 관세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자, 양국은 즉각 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36%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휴전이 성사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지역 분쟁 완화에 기여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12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분쟁이 심각한 무력 충돌로 확대되었으며, 12월 27일에 극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다(Bangkok Post 2025/12/30).

3.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

2025년 7월과 12월에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큰 분쟁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전면적인 전쟁으로 변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국경 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제약 요인을 들 수 있다. 현재 태국에는 약 120만 명에 달하는 캄보디아인이 거주하며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경 지역 출신 노동자들이다. 만약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태국 내 캄보디아인 추방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경향신문 2025/08/21). 특히 태국의 경우 경제 및 사회 문제의 심화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예를 들어,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집권 시기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지 기반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 집권층이 전쟁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이정우 2024, 195). 또한 양국 모두 전쟁 시

무기 구매 등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군사력 면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2026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해 병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방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캄보디아군은 게릴라전에 능숙해 양적인 전투력에서는 태국군에 뒤처지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정글 지역에서의 교전과 태국 내 도시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태국은 군사력에서 캄보디아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국은 유엔과 여러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7월 분쟁으로 인한 휴전 결과, 초기 36%였던 상호 관세율이 19%로 조정되면서 양국은 중대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조선일보 2025/10/27). 그러나 분쟁이나 전쟁이 재발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또한 양국 경제는 외부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분쟁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면 외부 투자 유치가 위축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태국과의 교류가 단절되더라도 중국과 베트남이 그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 규모가 크고 관광산업이 중요한 태국은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양국 모두 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7월 분쟁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신속한 개입과 10월 26일 휴전협정 중재 사례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30일 미·중 정상 회담에서 중국 역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양국 모두 해당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연합뉴스 2025/10/30).

아울러, 12월 분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 강력한 휴전을 촉구하였으며, 중국은 휴전 합의 후 태국과 캄보디아와 함께 3자 회담을 개최하여 휴전 공고화, 정상적인 교류 복원, 양국 관계 재건 등을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핵심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nation 2025/12/29). 또한, 중국이 캄보디아에 휴전 선물로 25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지원을 약속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분쟁은 미중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KHMER TIMES 2025/12/29).

결과적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지적 분쟁은 앞으로도 국경분쟁의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25년에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분쟁을 대상으로 하여, 브레머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군사적인 분쟁의 원인과 국가간의 전쟁’ 분석틀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이종호 2014, 187).

전쟁과정 이론에 기반한 분석 결과,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은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분쟁과 전쟁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조직적인 요소, 국가 속성, 이원적 관계, 역사적 경험 등 네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분쟁은 캄보디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마찰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여러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태국은 뿌리아 비히아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에 속한다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캄보디아 역시 이를 막기 위해 분쟁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분쟁은 여전히 잠재적인 갈등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분쟁과 전쟁은 단일한 열쇠로 풀 수 있는 단순한 자물쇠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다중 자물쇠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분쟁과 전쟁 문제는 한 가지 해결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보조적인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와 각 구성 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해결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이처럼 분쟁과 전쟁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브레머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방법 또한 의미 있는 접근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둘째, 분쟁과 전쟁은 단일한 사건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과 과정이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쟁과 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기 이전의 다양한 사건들에 주목하여, 전쟁 발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그림 2>에서 보여주듯 분쟁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는 해당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2023년 10월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모두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국가 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고, 비전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영토와 국경분쟁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우리를 심리적·물리적으로 혼란에 빠뜨려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사전에 이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논문, 다양한 서적, 방송 및 신문 보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브레머 교수의 분석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연구나 비판적 안보 연구 등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와 추가적인 이론적 발전이 요구된다.

투 고 일: 2025. 12. 12

심사완료일: 2026. 01. 12

게재확정일: 2026. 01. 13

참고문헌

- 권숙희. 2025. “시진핑 ”트럼프, 세계평화에 진심…미중, 전세계 사안에 큰 책임” 『연합뉴스』 (10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1030100700009> (검색일: 2025. 11. 9).
- 김은중. 2025. “美, 말레이·캄보디아와 무역 협정 발표… 태국·베트남과도 합의 이뤄.” 『조선일보』 (10월 27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10/26/HVMHQBZYB5DKXBNMOVNPQDVUOU/> (검색일: 2025. 11. 9).
- 김중우. 2025. “[인&아웃] 태국-캄보디아 분쟁…‘악연’의 역사.” 『연합뉴스』 (7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7041700546> (검색일: 2025. 10. 30).
- 김지원. 2025. “캄보디아는 다연장로켓 쏘고, 태국은 F-16 띄웠다.” 『조선일보』 (7월 25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7/25/SST7VOBEWBA3LOSUVWJ34DIU5E/ (검색일: 2025. 10. 30).
- 김홍구·이미지. 2019. “태국 2018: 군부의 ‘불안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동남아시아연구』 29(2): 127-159.
- 문용일. 2024a “ICJ 판결의 모호성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법학논집』 48(1): 45-47.
- _____. 2024b. “영토분쟁의 정치화와 ICJ: 프레아 비히어 사원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40(4): 167-201.
- 박성관. 2003. “캄보디아의 정치적 파벌과 민주화 과정.” 『동남아시아연구』 13(2): 326-336.
- 박장식. 2011. “캄보디아 빠리아 비히어 사원.” 『수완나부미』 3(2): 161-178.
- 박진영. 2025. “캄보디아 2024: 세습 권력의 연착륙.” 『동남아시아연구』 35(1): 78-104.
- 박진형. 2025. “태국-캄보디아 전면전 우려…압도적 전력 우위 태국군 선택 주목.” 『연합뉴스』 (7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

R20250725114800084 (검색일: 2025. 10. 30).

- 배일수·정희태, 2023.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에 나타난 군사사상 고찰.” 『군사』 127: 77-141.
- 스튜어트 A. 브레머, 토마스 R. 쿠삭(김병열 외 옮김). 1997. 『전쟁의 과정: 과학적 전쟁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 신희섭. 2025. “신희섭의 일상이 정치(753)-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 분쟁은 어디까지 갈까?” 『법률저널』 (7월 28일)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399> (검색일: 2025. 10. 30).
- 야로슬라프 루키프. 2025. “캄보디아, 태국에 ‘즉각 휴전’ 촉구.” 『BBC NEWS 코리아』 (7월 26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qy5xrnj4qo> (검색일: 2025. 11. 2).
- 외교부. 2022a. 『캄보디아 개황』. 서울: 외교부.
- _____. 2022b. 『태국 개황』. 서울: 외교부.
- 유진우. 2025. “‘트럼프, 8년 만에 참석’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美·中 ‘무역·안보’ 격돌.” 『조선비즈』 (10월 26일)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0/26/HXEV5KKADNEV7JGQLVAWV3AZRA/ (검색일: 2025. 10. 30).
- 육군본부. 2021. 『지상작전』. 충남: 국방출판지원단.
- 이동윤. 2004. “태국-캄보디아 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역동성: 2003년 1월 폭력사태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11: 99-143.
- 이병도. 2018. “태국 국경무역의 발전과 문제점.” 『국제지역연구』 22(2): 245-272.
- 이운범. 2011. “캄보디아 훈센의 외교 전략과 전망.” 『동남아연구』 21(3): 99-134.
- 이정우. 2024. “태국 MZ세대의 SNS 활용,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이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43(2): 193-231.
- 이종호. 2014. “전쟁과정 이론을 통해 본 러일전쟁 開戰과정에 관한 연구.” 『군사연구』 138: 183-211.
- _____. 2022. “전쟁과정 이론을 통해 본 병자호란 開戰원인에 관한 연

- 구.” 『한국군사학논총』 11(4): 173-193.
- 임경한. 201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이 대응전략.” 『국제정치연구』 22(4): 81-107.
- 임은희. 2019. “태국의 국경경제특구와 메콩지역의 경제통합.” 『아시아리뷰』 8(2): 35-63.
- 정연식. 2006. “캄보디아의 선거과정: 정치적 기능과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16(1): 93-118.
- _____. 2024. “캄보디아 2023: 선거와 권력 세습.” 『동남아시아연구』 34(2): 1-27.
- 정용균. 2018. “캄보디아의 분쟁해결문화와 협상방식: ADR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8(2): 3-39.
- 조나단 헤드. 2025. “태국 헌재 ‘총리 해임’ 결정, 유출된 전화 한 통에...” 『BBC NEWS 코리아』 (8월 29일)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7ylyv6ggdo> (검색일: 2025. 11. 2).
- 조상현. 2016.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힌두교 사원 귀속력 어디로?.” 『통일한국』 11: 46-47.
- 주용식. 2017.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7(3): 93-135.
- 채현정. 2019. “경제/국경과 국가 인식의 문제.” 『역사연구』 36: 329-342.
- 최경윤. 2025. “태국-캄보디아 분쟁 여파로 노동시장도 후유증.” 『경향신문』 (8월 21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11814001> (검색일: 2025. 11. 9).
- 하승연. 2025. “‘내년부터 18~30세 모든 국민 군 복무’... 징병제 도입한다는 ‘이 나라’ 왜?.” 『서울신문』 (7월 15일)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7/15/20250715500079?wlog_tag3=naver (검색일: 2025. 11. 2).
- 한국무역협회. 2025. “[캄보디아 시장뉴스] 트럼프, 캄보디아산 제품에 49% 관세... 무역 긴장 고조”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뉴스』 (4월 3일)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

- Detail.do?postIndex=1857996&boardType=0 (검색일: 2025. 10. 30).
- _____. 2025. “[태국 시장뉴스] 태국,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뉴스』 (5월 8일)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News/overseasMarketNewsDetail.do?postIndex=1856618&boardType=0> (검색일: 2025. 10. 30).
- 합동참모본부. 2023. 『군사기본교리』. 충남: 국방출판지원단.
- 허경주. 2025. “타국 실권자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군 ‘뒷담화’... 태국 총리 실각 위기.” 『한국일보』 (6월 21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009160002123> (검색일: 2025. 10. 30).
- 현시내. 2024. “민주화를 위한 과거와의 대화: 태국의 1973년과 2023년.” 『동아연구』 43(1): 143-178.
- AEKARACH SATTABURUTH, 2025. “Politics -- a year of turmoil and transition.” *Bangkok Post*. December 30.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165805/politics-a-year-of-turmoil-and-transition> (검색일: 2025. 12. 31).
- Hin Pisei, 2025. “Defence budget sees only small increase for 2026.” *The Phnom Penh Post*. December 27.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defence-budget-sees-only-small-increase-for-2026> (검색일: 2025. 12. 30).
- Nucup, Neil B. 2019. “Infallible or Final?: Revisiting the Legitimacy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s the “Invisibl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18: 152.
- ONLINE REPORTERS. 2025. “BREAKING NEWS: Cambodia and Thailand agree to ‘immediate ceasefire after the time of signature of this Joint Statement with effect from 12:00 hours noon (local time) on 27 December 2025’.” *KHMER TIMES*. December 27.
<https://www.khmertimeskh.com/501816361/breaking-news-cambodia-and-thailand-agree-to-immediate-ceasefire-after-the-time-of-si>

gnature-of-this-joint-statement-with-effect-from-1200-hours-noon-local-time-on-27-december-2025/ (검색일: 2025. 12. 30).

_____. 2025. “Thai historian urges govt to reject ICJ ruling, retake Preah Vihear.” *The Nation*. December 29.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asean/40060494> (검색일: 2025. 12. 30).

_____. 2025. “Thai soldier killed, 8 wounded as Cambodia resumes attacks: Thai forces strike back, planes hit military targets.” *Bangkok Post*. December 8.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52249/thai-soldier-killed-8-wounded-as-cambodia-resumes-attacks?utm_source=taboola&utm_medium=organic_content_recirculation (검색일: 2025. 12. 30).

_____. 2025. “Thailand and Cambodia set three-month timeline to achieve three key goals.” *The Nation*. October 28.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57410> (검색일: 2025. 11. 03).

_____. 2025. “Thailand, Cambodia and China hold trilateral talks after ceasefire agreement.” *The Nation*. December 29.

<https://www.nationthailand.com/blogs/news/asean/40060488> (검색일: 2025. 12. 30).

_____. 2025. “Army says ICJ didn't define disputed area.” *Bangkok Post*. December 26.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63678/army-says-icj-didnt-define-disputed-area> (검색일: 2025. 12. 30).

Som Sotheary, 2025. “China pledges \$2.5 million in emergency relief aid to Cambodia.” *Khmer Times*. December 29.

<https://www.khmertimeskh.com/501816874/china-pledges-2-5-million-in-emergency-relief-aid-to-cambodia/> (검색일: 2025. 12. 30).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 of Thailand-Cambodia Border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to War:

Based on the Bremer analysis framework

Kim, Chang Hwan
Army Colleg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and the process of war development were systematically considered by apply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cause of military conflict and war between countries, proposed by Professor Bremer's research team, to the Thailand-Cambodia conflict in 202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war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Thailand-Cambodia conflict w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organizational elements, state attributes, dual relations, and historical experiences.

In particular, the border dispute, which has continued since Cambodia's independence from France, has several factors of conflict even aft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ruling on the Temple of Preah Vihear in 1962. Although the temple is currently under a truce due to sharp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re likely to use the border issue as a means of maintaining power and achieving political goals by linking it with their patriotism. However,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full-scale war is considered to be very low.

Keywords: The Thailand-Cambodia Conflict, The Cause of Military Conflict and War Between Countries, Professor Brem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emple of Preah Vihear